

전환기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경영전략



白 永 勳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院長, 경제학박사

걸프(Gulf)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전쟁의 가속과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호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그 활력을 재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은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정책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각부처간의 협조체제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對外的 경제환경은 걸프전쟁의 영향, 국제 통상마찰의 가중 및 EC등 지역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등 개방화 자유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경제환경여건 변화와 당면 문제점

대내적 경제환경여건에 있어서도 최근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경제의 앞날이 걱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부진현상에 있으며, 제조업의 경기침체와 시중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업의 자금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이에따라 기업투자의욕이 감퇴하고 있다.

최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치소비품의 수입증가와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노임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이로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는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육성지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간 정부주도하의 과학기술투자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운동상의 총체적 경제위기——

성장 및 투자의욕은 '80년대 후반들어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퇴색과 더불어 노사분규, 원화절상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수출환경의 변화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출의 부진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생산성향상 유도등에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기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경제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협소한 국토면적과 남북분단상황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인 사항이다.

성장활력의 지속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수출제품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출산업계에서 기술축적력의 배양과 선진기술의 개척을 위한 잠재력을 축적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다.

모방기술과 도입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을 탈피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술입국으로의 실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대외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등 수출주종품목의 구조적인 사양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은 내수산업 중심의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기업은 수출상품에 대한 신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이 부진하여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설비투자 및 기능인력의 부족 원자재조달 애로등으로 경쟁력은 낙후되고 있으며, 특히 부품생산업체는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술기반 구축면에서 기술개발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기반을 다짐으로써 생산성향상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NP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은 '89년 기준으로 1.92%('88년기준 : 1.9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기술개발투자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과거에 그 위상이 정립되었던 대통령 영도(領導)하의 방위산업 심의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협의기구의 부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민간 방위산업체도 정부지원과 육성정책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영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더욱 확고히 다짐함으로써, 국가생존과 방위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목표추구에 헌신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자생적인 경영풍토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방위산업의 활성화 저해요인

현재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고임금, 고물가, 저성장이 유도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노사의 격렬한 대립, 수입개방 및 투자이욕 감소등 국내외적 요인에서부터 정치사회경제의 시대적 요인등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총체적 위기상태라 할수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국내외 산업경제의 환경여건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수 있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방위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지의 퇴화이다.

오늘날 우리 방위산업을 둘러싼 현정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지의 부족과 민간기업의 의욕상실로 인해 방위생산력의 유지보존 자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국방정책과 국가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데 있다.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측면만 고려한 획득개발정책으로는 연구개발이 침체될수 밖에 없으며, 국방과학기술과 商工정책 및 민수과학기술과 연계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한 그 효율성은 반감될수 밖에 없다.

셋째, 국가정책의 합리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 획득관련 제반규정은 전력증강 목표설정의 기초아래 국가통치차원의 결심단계인 만큼, 정부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로 기획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에 신중한 계획수립이 요망되고 있으나, 정보판단 전략기술개발 전문연구부서의 통합관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특히 人事에 의해 수시로 변할수 있어 이로인한 정책의 합리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넷째, 방위산업조달 규모의 한계성과 시장의 경직성에 있다.

방산제품은 군의 소요 또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기술소요에 의하여 새로운 무기를 연구개발 생산하여야 한다. 특히 제한된 국방비중 소요군의 무기체계상 필요시기와 필요량에 따른 전략증강계획은 방산업계 측면에서 볼 경우 민수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다.

방위산업 고도화로 독자적인 고도정밀 무기개발 및 주요 핵심부품은 물론 국제화시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와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방산기술을 통한 KNOW-HOW의 집적을 가져오으로써 한국적인 기술습득의 정착화를 가져오고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국내 기술기반조성 및 연구개발투자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稅制)개선 및 보상등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하였다.

여섯째, 연구기관의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구개발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각부처(연구기관)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방과학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 기술협력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

일곱째, 고도의 방위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계열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체의 생산체제는 설비투자의 중복을 피하고, 생산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측면에서 무기체계별, 기능별, 주요 구성품목별로 기술 및 시설이 우리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문생산체제로의 전문계열화가 에 있다.

방위산업 활성화 및 기반강화 제언

● 국가의지와 성장잠재력에 의한 전략의 재평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족한 자본의 애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가 택할수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국가공업정책(국방정책)의 방향제시에 따라 크게 좌우될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지와 성장잠재력에 따른 전략재평가에 의해 미래 전력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주도적인 획득개발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획득개발기본정책이 수립되어 있다하더라도 국내 상황과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무기체계 추세와 직결되는 전력증강방향의 과감한 수정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 연구개발의 활성화

국방연구개발은 2000년대의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주적인 연구개발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군사기술에 대한 군의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전력증강 투자소요 또한 막대한 규모로 증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들의 무기 및 고도기술 이전에 많은 장애가 놓여있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가용자원으로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정책을 검토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방향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단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 있는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연구기술과 국방연구개발에 응용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기술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가들과 현재 민간분야나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협력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의 협력관계로 개선, 발전시켜 기술획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국방 및 민수용 핵심과학기술의 대부분이 다같이 활용할수 있는 공용기술임을 감안할때, 현재 정부 각부처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의 기술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협력체제의 강화가 시급하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네 탓이야...

컴퓨터업계의 천재가 친구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가 이번에 사람하고 꼭 닮은 컴퓨터를 개발했다구...』

친구가 물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줄도 안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컴퓨터를 탓하는 컴퓨터야』

특히 범국가적인 국방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종합통제 관리할수 있는 가칭(假稱)「과학기술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이를 육성발전시켜 공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과 민수기술과의 상호 연계성을 부여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첨단 고도정밀병기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토대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생산성 제고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와 품질수준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비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에대한 주요정책방향은 전략품목 및 외국정부의 통제품목과 고도정밀부품으로 배터제(give and take) 대상품목 및 두뇌집약적 소프트웨어 기술품목등에 중점적으로 개발비를 투자해야 할 것이며, 핵심부품의 집중개발 등 국내개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 수출진흥과 국제경쟁력.제고

방산수출을 위한 당면과제로는 한국형 수출전략품목 개발과 대미(對美) 방산협력관계(산업간의 협력체제 강화, 동원협력체제의 구축, 균등한 경쟁기회의 부여), 생산 및 연구개발기반의 구축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강화의 모색 즉, 정부의 간접지원책 강구와 방산수출을 주도할수 있는 민간주도의 상설기구를 구축하고,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방산수출은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한/미간 양해각서 및 기술협정서에 따라 제공된 관계로, 수출품목에 대한 對美승인이라는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산수출을 주도할수 있는 민간주도의 상설기구 「콘소시엄 : Consortium」기능을 강화시켜 수출진흥에 전념할수 있도록 판촉 및 수요개발을 위해 정부 방산수출지원(국방부, 상공부, 외무부, 안기부 등)기구의 협조하에 민간주도형의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상사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의 특성으로 인한 보안성 유지, 수출창구의 원활화, 전략품목 개발 및 마케팅 활동 강화, 해외정보수집/교환 활동등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 국제화 추세속에서 교역질서의 재편을 통하여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의 향상은 대외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기업들과 경쟁에 대비하는데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정보화와 자동화를 급속히 진행하면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방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우리가 구미 선진국의 Engineering, Marketing, Financing 능력과 우리나라 Manufacturing능력을 결합하여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하여 상호 이익과 경제적 평등을 획득할수 있을 것이다.

● 방위산업기반의 재정비 육성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재편성을 위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군 소요물량의 충족에 따른 내수기반의 한계성과 국가재정의 제약성에서, 고도화된 병기개발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생산시설을 토대로 국제화시대로의 활로를 개척하여 미래의 국제적 성장산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전문계열화를 통하여 국제화시대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도모하고 투자자본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생산체제는 2000년대의 방위산업구상에 부합되고, 생산체제의 구조를 고도화(설비이용 고도화, 경영합리화)

할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상호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위산업 발전측면에서 전문계열화의 과감한 재정비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70년대초 출발당시부터 방산업체(물자)로 지정, 일부업체가 지정취소되거나 신규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당시 정부의 복수업체 선정 및 투자중복과 그간의 지정에 따른 역할분담에 의한 획적인 물자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전문계열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현재까지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면서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도 정밀무기류 및 부품을 국내개발생산하는 것이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개발에 의한 고도정밀병기의 획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계열화, 복수계열 및 기술집약, 공업발전 및 과학기술(국방과학기술)을 고려하여 역할분담에 의한 「메트릭씨스템」으로의 전문계열화를 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산업은 선진 여러나라의 경제발전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방위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상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방위산업의 육성전략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一笑一少一怒一老

대단한 아이(3)

승민이네 선생님은 산수를 가르칠때 구체적인 예를 들곤 하였다.

「자, 승민아, 아빠가 엄마에게 만원을 줬다가 5천원을 도로 뺏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자 승민이가 또렷이 대답했다.

『또 한바탕 싸우겠죠』

* 자주국방력은 국민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적절한 규모에서 끊임없이 축적강화되어야 한다.

* 방위산업은 장기적 개발효과를 목표로 하여 일관성있게 육성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억제와 경제불황 등 가급적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수 없다.

* 국방비 예산편성의 가장 핵심적 기준은 국가보위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기준에 있으며, 특히 투자비의 생산적 기능과 투자효과 및 기술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야 한다.

* 방위산업은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의 유발효과를 창조하고, 분업화의 기반을 촉진하게 된다.

* 방위산업은 민간기업의 관리능력을 배양하며,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게 된다.

방위산업 경영전략의 재정립

● 고도산업국가 기반으로서의 방위산업 —

방위산업 육성을 일부 방산물자나 조변하고 방위에 소요되는 일부 병기와 관련 제품을 조달한다는 지엽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발전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등 앞으로 과열되는 개방화 압력과 국가산업에 대한 정부보호는 정책의 한계성에 대비하여, 국가안보상의 자주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산업보호정책의 기틀로서, 방위산업 육성체제가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은 국민 의지와 정책참여자의 슬기로운 지혜 그리고 경제주체로서 일선에서 싸워가는 기업인의 숭고한 개척자적 정신과 근로자의 노력 없이는 고도산업사회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방위산업 육성은 물론 고도산업국가로 도약하는 일은 순탄한 길이 아니다. 경제체질을 개혁하고 산업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용자원의 재편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단력이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 지도력과 정책당국은 물론 기업가 스스로의 결단력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의 파고(波高)를 이겨낼수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할일은 방위산업을 비롯하여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중/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업활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쟁시장에 알맞도록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기업은 기업으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자력과 자립의 새로운 변신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도 이제는 전문영역에서 세계화기반을 구축하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정부의존에만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제기업 민족기업 기업의 시민화 의식 등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참신한 기업위상을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새로운 경영전략 —

우리경제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특히 앞으로 경제는 보다 더 긴 안목에서 새로운 성장함수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가온 고도산업사회에로의 혁신과 이를 통한 성숙단계로의 이행을 추구할수 있는 포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등 개방화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가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과 합리성 제고(提高)라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전통적으로 누적된 사회 낭비와 불합리한 경제관념이 이어져 왔으며, 효율성과 능률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체질화된 여러 낭비요소가 자본주의 사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크게 저해(沮害)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때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숙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은 아직도 그 길이 멀다고 판단하지 않을수 없다.

맺는 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공장자동률의 저하, 시장의 한계성, 시설 및 기술의 낙후, 노사분규와 인건비의 상승, 기업 채산성의 악화등 여러 경영여건 변화로 국제경쟁력이 퇴화되고 있음은 물론, 기업으로서의 생존과 존립기반이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볼때 현재의 육성정책하에서 방치된다면 앞으로 방위산업은 재기 할수 없는 어려운 측면에 까지 파급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전(全)업종에 걸쳐 방위산업이 이와 같이 어려운 경영여건에 직면하게된 것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전면적 퇴화와 일관성있는 육성정책이 결여되어 온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사기저하와 방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요원과 연구가의 창의력 퇴화는 방위산업의 침체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방위산업의 총체적 위기현상은 국가적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의 국토방위와 자주적인 국방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걸프(Gulf)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전쟁의 가속과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호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그 활력을 재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실정에 입각하여 볼때 방위산업 육성은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정책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일관성있는 정책수단의 개발과 각부처간의 협조체제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과거에 그 위상이 정립되었던 대통령 영도(領導)하의 방위산업 심의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협의기구의 부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간 방위산업체도 정부지원과 육성정책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영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더욱 확고히 다짐함으로써, 영리추구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생존과 방위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목표추구에 헌신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자생적인 경영풍토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후 무기수출시장의 활로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에 관련한 관·민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방산기술 고도화의 기틀을 더한층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기반위에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하여 고도산업국가로 새로 도약하는 일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경제체질을 개혁하고 산업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재편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사용자원의 재편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단력이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 지도력과 정책당국은 물론 기업가 스스로의 결단력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波高)를 이겨낼수 있는 것이다.*